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는 어떻게 탄생될 것인가?

편 집 부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약칭 축협 중앙회로 부르기로 한다.)가 명년초에 탄생하기 위하여 준비 작업에 피치를 올리고 있다.

현 축산 진흥회가 자리잡은 교원 공제 회관 8층에 9월 20일 설립 사무국이 설치되어 모든 필요한 작업이 진행중이다.

축협 중앙회 설립 사무국장에는 이종민 축산 진흥회 부회장이 차장에는 이태영 축진 기획 부장과 이금수 농협 중앙회 특수 조합부차장이 임명되었으며 법규 제도반 기구 통합반 심사 정비반의 3개 반으로 나누어 작업이 진행중이다.

아직은 축협 중앙회 설립 법률안이 최종 확정되어있지 않아 독자들에게 속 시원히 그 모양을 선보일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다만 지금까지 업계에서 얘기되는 축협 중앙회를 소개하여 궁금증을 다소나마 풀어볼까 한다.

앞으로 탄생 될 축협 중앙회의 조직은 중앙회 밑에 현 축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조합과 업종별 조합 즉 양계 협동조합 양돈 협동조합 낙농 협동조합 등 축종별 협동조합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축협은 현 축협이 중심이 되는 지역 조합이 중심이되며 여기에 광범위하게 각 축종별 양축가가 다수 참여하게 되며 여수신업무등 금융 업무도 맡게되며 이 지역 조합을 중점 육성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 지역 조합이 소규모 축산업자 보호로 축산 진흥에 기여하게 되며 업종별 조합을 일정 규모 이상의 전업 또는 기업 양축가가 들어 참여하게 되어 전문 조합으로 발전 육성되어 질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축협 중앙회의 사업은 현재의 농협을 생각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현 농협에 있는 축협이 지금까지 하던일을 농협에서 분리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아 큰 차이가 없겠다.

아직 회원의 자격이나 의결기관인 임원 또는 조합장 중앙회 회장등의 선출 방법이 밝혀지지 않는다고 있으나 현 농협이 중앙회장각 조합장을 선거가 아닌 임명제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와 유사한 형태가 되어 질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현 서울 우유 협동조합 지역이나 지방에 낙

협이 있는 지역에서의 축협은 낙농업자의 참여가 거의 없는 것과 같이 앞으로 업종별 조합과 지역별 조합간의 조화있는 발전등이 어떻게 이루어 질지는 미지수이며, 잘못된 운영될 경우 업종별 조합이 대군업자의 보호기관으로 축협의 본래 목적인 영세 소규모 농가의 보호와는 거리가 먼 방향으로 운영되어 부업 이하의 양축기반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겠다.

많은 기관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부서와 일반사업 부서와의 갈등등이 있을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것등의 문제나 의결기관과 집행하는 기관이 동일인이 되어 조합의 운영이 경직 될

수도 있겠다.

현재 양축가들이 사료값의 인상과 경기의 침체로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어 축협 중앙회에 대한 기대는 대단하여 우리 업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여줄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있어 더욱 그 짐이 무거울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모든 것을 다하려는 것 보다는 우리 업계의 가장 고질적인 생산물의 유통구조에 중점을 두어 가격 안정에 힘써 주기를 양축가들은 바라고 있다.

이번만은 축산인이 적극 참여하여 축산인에 의하여 이용되는 조합이 탄생되어 지기를 바라며 다음호에 그 모습을 소개코저 한다.

(p. 39에서 계속)

사료가격인상에 대한 양축가 반응

윤경중 (채란업 · 서울농장)

옥수수 등 원료가격 인상 요인에 의한 사료가격 인상은 어쩔 수 없다 하겠으나 사료공장 자체에 인상분의 일부가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사육자에게 전가 되는 것은 무리다.

사육자들로서는 지난 호황기의 사육수수 수준보다 높아 현재 생산과잉 상태에 있으므로 저능력 산란계의 도태와 강제 환우를 활용해서 적응해야 할 것이다.

김광옥 (채란업 · 동두천분회장)

결국 금년도 총산 70% 정도가 인상 되므로 양축가에게는 치명적이다.

사료가격 자유화제도 이면서 모든 사료공장이 일률적인 인상률을 보인다는 것은 모순이며 160만 축산 농가의 사후 보호 대책이 없이 일방적인 대폭 인상은 우리나라 축산업을 존폐기로 몰아 넣는 것이다.

당국에서 적극 적으로 개입하여 양축가의

위기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특히 국내 축산은 장기적인 식량정책 입안 측면에서도 식량증산을 위해 산성화 된 토지를 개량하기 위해서도 가축분뇨 이용은 필수적이다.

특히 양계 산업의 기반이 와해될 중대한 시점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마땅 할 것이다.

김성경 (대지농장) : 너무 놀라울 일이다. 물론 인상요인 때문에 그렇게 대폭 인상된 것이겠지만 가뜰이나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양축가들이 인상액을 떠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노릇이다.

정부의 면세 혜택이나 양계산물 유통 소비, 산물 가격에 대한 특별한 보장이 없다면 거의 대부분이 도산 위기에 물려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양계인들은 조만간에 단합 대회를 열어 방안을 강구하고 활로를 찾아야 겠다.